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12/ 13 통권 1653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관시는 없다(2)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는 간이영수증이 적격 증빙으로 인정됨
-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제공 후 현금(외화) 수취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아님 (p.11)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인턴 채용 근로소득이나 현장실습비 · 각종 보상금의 과세여부>

개념구분		근로소득여부, 과세소득범위, 비과세 여부(내용, 규정)
과세소득	근로소득	근로제공의 급료, 봉급, 임금, 상여 등과 각종 부가급여 등(소득세법 제20조)
	퇴직소득	근로제공기간 중 별도의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현실적 퇴직금, 연금일시금 등(소득세법 제22조)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에 속하지 않는 일시적, 우발적 금전으로 구체적 열거(소득세법 제21조)
비과세	병사, 동원직장	병역의무 중 병장 이하 현역병, 의무경찰 등(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 · 나목)
	요양급여, 휴업보상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요양 · 휴업급여 등,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금 · 휴업보상금 등(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 · 라목)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사망일시금 등	국민연금법상의 사망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바목)
	학자금 지원액	근무하는 사업체의 업무관련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실비변상급여	일직료, 숙직료, 식료, 실비변상적여비 등, 시내출장 20만원 내 소요비용(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현장실습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상의 학생이 받는 현장실습비(기재부 소득 153, 21.3.9.) : 비과세(과세소득 아님)
과세소득 여부	현장실습비	대학생 현장실습비는 유권해석 규정 없음(기타소득으로 법정경비 60% 인정, 40%는 과세되지만 대부분 금액이 낮아 실제 세금부담은 적음)
	기타소득분류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운중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53호 / 주간 50호

2023. 12. 13. (수)

·발행인: 이윤선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목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인턴 채용 근로소득이나 현장실습비·각종 보상금의 과세여부	표지
C E O 에 세 이	판시는 없다(2)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국내사업장이 있는 해외법인과 거래 시 문의 - pass through 매출 처리 문의 - 퇴직자에게 지급된 스탁옵션 실행 소득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는 간이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됨	6
매일 절세 재무요점	- 연말정산 전략 -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8 9
직장인 Survival	실패 속에 기회가 있음을 잊지 마라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3013, 2022.10.06) -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준법무재산-71, 2023.04.28)	11 12
세정뉴스와 해설	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늘어난다... 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	13
마케팅 Tax consulting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제공 후 현금(외화) 수취한 경우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아님	11
세무정보	-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14 38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 판시는 없다(2)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동광시왕(東方希望)그룹의 류용싱(劉永行)회장은 미국 포브스지가 최고의 부자로 선정한 적이 있다. 그의 체험적 판시론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판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동광시왕구룹은 1982년 쓰촨(四川)성에 살던 류희장 4형제가 1천위안의 돈으로 시작한 기업이다. 당초에는 병아리를 키우는 사업으로 시작했다. 이들은 1년 동안 8만마리의 병아리를 팔아 10만위안을 벌었다. 이후 그들은 메추라기 사업으로 성공가도를 달렸다. 1988년 이들은 사료업에 뛰어들어 시왕사료회사를 설립했다. 당시 중국에 사료를 공급하던 태국의正大(正大)그룹은 비싸게 사료를 팔았다. 시왕사료회사는正大그룹보다 싼값에 사료를 생산·판매했다. 당연히 성공했다. 90년대 들어 이들은 상하이 푸둥(浦東)지구로 사업기반을 옮기고 오늘에 이르렀다. 첫째 류용엔은 전자·첨단기술업을 주로 하는 다루시왕그룹을 경영한다. 둘째 류용싱은 사료·알미늄업을 주로 하는 동광시왕그룹을, 셋째 류용메이는 부동산·호텔업을 주로 하는 화시시왕그룹을, 넷째 류용하오는 금융·사료업을 주로 하는 신시왕그룹을 이끌면서 대성공을 이루었다.

그들의 중심인물인 류용싱 회장의 말이다. “판시는 단기간에 어느 정도 편리와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효율적인 기업문화와 앞선 경영방식 그리고 선진기술 등에 있다. 시왕그룹은 쓰촨성 시골에서 창업했고 의지할만한 판시도 없었다. 우리는 관료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고 판시에 기웃거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우대정책을 받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레 판시가 좋아진 것이다. 정부가 우리기업을 믿고 우리의 경영방식과 발전 전망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가 한국의 BBQ와 공동으로 외식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 이유도 BBQ와의 ‘술 취한 판시’ 때문이 아니다. 시장의 가능성과 BBQ의 차별적 경영방식 때문이다.

“중국엔 아직 배달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가맹점이 잘돼야 본사도 잘 된다’는 BBQ의 경영이념이 마음에 들었다.”

따라서 판시는 중국에서만 유독 강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경쟁력의 중요성은 중국에서만 중요하거나 통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영어로 릴레이션십(relationship)이나 인간관계를 강조한 상거래에 모두 통용되는 말이다. 성실과 신용을 통하여 두텁게 쌓이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줄속이나 표피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 터치(skin touch), 술과 쾌락의 접대로 이루어지는 싸구려 인간관계는 절대 자산이 아니다. 오랜 세월 지속적인 겸손과 정직이라는 만국 공용어가 기본이다. 그러한 기본 위에서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의 산물(産物)이다. 이제 그들도 한국인의 허풍과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당할 만큼 당했다고 할 수 있다. 넘쳐흘러 쓰레기를 남기는 접대음식물은 환경오염을 낳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걸림돌인 신용파괴라는 오염을 생산한다. 그러한 판시는 중국에도 이제 없다. 판시는 물량주의 인맥도 결코 아니다. 2000명 넘는 사람과 형님 아우 한다고 자랑했던 약간 머리 돈 한국정치인이 있었다. 실소를 금치 못할 코미디가 아닌가.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1일 (금)	12월 4일 (월)	12월 5일 (화)	12월 6일 (수)	12월 7일 (목)
미	달	러	(USD)	1290.40	1303.20	1301.80	1311.70	1312.40
일	본	엔	(JPY)	871.21	890.41	884.53	891.55	891.36
영	국	파	운 드	(GBP)	1629.65	1657.15	1644.50	1651.69
캐	나	다	달 러	(CAD)	951.66	966.01	961.63	964.91
홍	콩	달	러	(HKD)	165.22	166.77	166.56	167.76
중	국	원	(CNH)	180.70	182.29	182.48	183.60	183.16
유	로	화	(EUR)	1405.37	1418.60	1410.57	1415.85	1413.06
호	주	달	러	(AUD)	852.57	870.02	861.92	859.23
싱	가	폴	달 러	(SGD)	964.97	977.09	973.13	977.7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6.94	278.85	279.51	281.27

## 국내사업장이 있는 해외법인과 거래 시 문의

Q

국내사업장이 있는 해외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용역형태의 구조는

- 당사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해외업체에게 발주
- 해외업체는 국내에 있는 사업장(국내지점)에 다시 발주
- 해외업체의 국내지점에서 당사에게 물품을 납품
- 납품받은 후 당사는 해외업체에게 외화로 대금지급
- 해외업체는 해외업체의 국내사업장에 대금지급

이런 형태의 거래일 경우에 당사는 해외업체에 부가세없이 물품대금만 외화로 지급하면 되나요?

또한 해외업체와 해외업체의 국내지점간의 거래에서는 부가세가 부과되는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국내지점이 자산의 해외업체(본점)와의 거래에서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A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국세청 유권해석 참조)

외국법인과 국내지점간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는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관련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부가46015-160, 2000.01.20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이 국내의 사업자(을)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사업자(을)로 하여금 직접 공급하도록 한 경우, 외국법인(갑)을 위하여 국내의 사업자(을)가 제품 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때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5호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는 국내의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pass through 매출 처리 문의

**Q** 원자재 수급을 위하여 당사는 국내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 관계사에 추가적인 핸들링 없이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관계사에서 수정 가공하여 우리가 다시 재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Q1. 국내 external 업체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 관계사에 추가 핸들링 없이 수출할때, 전포 계정을 매출 계정을 치고 매출 부가세로 신고 하면 되나요? 어떤 계정을 써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지 질의 합니다.

Q2. 해외 관계사에서 핸들링 후, 우리가 다시 재수입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 후 입고처리 하면 되나요?

**A** 1.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 해외 관계사에게 대금을 받고 수출하는 거래라면 매출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가공을 마친 재화에 대해 전체 금액을 지급하고 수입하는 거래라면 역시 일반적인 수입거래로 반영 하면 됩니다.

3. 다만, 수출품에 대한 대금을 받지 않고 임가공비만 지급하는 거래라면 매출거래가 아니므로 수출을 하더라도 귀사 소유의 물품을 임가공을 위해 장소만 이동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퇴직자에게 지급된 스톡옵션 실행 소득

**Q** 안녕하세요.

퇴사자가 본사로부터 받은 Stock Option을 퇴사 후 매각하여 발생된 소득이 6개월 후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소득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세율을 문의 드립니다.

**A**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는 간이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그동안 별다른 고민 없이 지출처리를 했던 소액의 거래들에 대해서도 지출증빙 입수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액거래들 중 주로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유료도로 통행요금이나 통행카드충전비용의 증빙수취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유료도로 통행료는 법정증빙영수증 수취의무가 없다

법인의 대부분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법인이기에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통해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 출장 등으로 인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카드를 충전하거나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애매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행요금(통행카드충전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이 아닌 일반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에 대해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지급하는 통행료에 대해서는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만 잘 챙겨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또한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받지도 않는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사용료 또는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유료도로 통행료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데, 업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통행료를 지급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한국도로공사에 지급하는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가 징수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과세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이용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이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비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이 때 도로 및 관련 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으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별도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서면3팀-1553, 2005.09.1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 받고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특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차의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서삼46015-11350, 2003.08.23)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 영수시에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내역을 별도 기록관리하여 월합계 또는 1억원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합계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연말정산 전략

전략	혜택 요약
연금저축 · IRP 가입 또는 추가납입	최대 148만5000원 돌려받는다
안 입는 옷, 잡화, 가전, 도서 기부하기	기부액의 최소 16.5% 돌려받는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영수증 챙기기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인정
장애인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기	200만원 소득공제 추가인정
근로자로 세대주 변경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40%가 소득공제 인정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각 100만원씩 소득공제 추가 인정
문화활동 적극 참여	100만원 소득공제 추가 인정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월세 세액공제 18.7%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학자금 대출상환액의 16.5% 돌려받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하기	분양권과 입주권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가능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 대주주 요건

특정 종목 지분율 1% 이상(코스피 또는 상장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 양도세율

주식 양도소득에 20% 세금 부과  
(양도소득 3억원 초과시 25%)



##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혼인 ·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 공제(혼인 + 출산 통합 공제한도 1억원, 미혼 출산 가구도 적용)  
기본 공제액 5,000만원 + 1억원 → 1억5,000만원까지 공제(부부 최대 3억원)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 적용 과세 구간 확대  
현행 6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기존 5년 → 15년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 한도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 한도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액 및 공제대상 확대

공제액 확대 및 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 둘째 20만원으로 확대

###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 올해분의 105% 초과 시 사용액 10% 공제 (한도 100만원)



## 세법개정안 중 혼인 증여재산 공제 상세내용

증여재산 공제한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원	(좌 동)
직계존속 → 직계비속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000만원	(좌 동)
기타친족	1000만원	(좌 동)

\* 신랑 신부 혼인 증여재산공제(각 1억원) + 현행공제(각 5000만원) 활용 시 최대 3억원 지원 가능



## 실패 속에 기회가 있음을 잊지 마라

실패학 강사 김동조 씨는 주식투자로 7억이라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사람이다. 1987년 증권회사에 입사한 그는 활황이던 주식시장을 믿고 빚을 내어 주식투자를 했다가 큰빚을 지게 되었다. 그는 12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빚을 얻어 재투자를 했고, 빚쟁이들의 빚발치는 전화에 죽음을 결심할 만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실패를 숨기려 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신의 실패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자산으로 삼아 4년 만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고, 그 후 기업이며 단체 등에서 강의 요청이 끊이지 않는 실패학 강사로 성공적인 재기를 하게 되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다시 실패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실패했다 해도 훗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중요한 것은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면 실패는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서도 그 밑바탕이 되는 실패는 회피하려고 한다. 실패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절망감과 ‘실패한 사람은 무능력한 자’라는 인식 때문에 본능적으로 실패하지 않으려 하고, 무조건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언제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보다 큰 성공을 이루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 최 신 판 례 예 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제공 후  
현금(외화) 수취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아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한 경우 외화입금명세를 붙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규소득-298, 2023.05.31

### ■ 질 의

-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갑'(이하 "신청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소재 외국법인 '◇◇◇'에게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설치 관련 서비스세무컨설팅 및 세무상담용역(이하 "쟁점서비스")을 제공하고, 대금 \$○○을 '23.3.27.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함

### 질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  
는지 여부

###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같은 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 경우, 해

당 거래는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할 사항입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3013, 2022.10.06

### ■ 질 의

- 의료업자가 감염병관리기관(이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입게 되는 사업상의 손실을 사유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준법무재산-71, 2023.04.28

### ■ 질 의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 제과-415, 2023.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5, 2023.5.15.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공통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통비용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총수입금액과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의 합계액에서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라 안분 계산되는 것입니다.

<산식> 공통비용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 = 공통비용 ×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 (총수입금액 +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끝.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기준법무재산-177, 2023.03.29

### ■ 질 의

- (관련규정)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상증령 49①)
- (질의)과세관청은 법인이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주식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하며 이때, 법인이 전체(100%)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30%)만을 감정평가 후  
- 그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아 전체 지분(100%)으로 환산한 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로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4, 2023.03.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합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늘어난다... 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8세 이상)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35만원으로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첫째아에 대해서는 15만원 공제액이 유지된다. 셋째아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현행대로다. 이에 따라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30만원) 공제를 받게 된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공제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포함한 것이다.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이 종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약 2배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정치다.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홀벌이 가구와 2천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혼인·출산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원이 공제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부 합산으로는 3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셈이다.

출산하는 경우에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추가로 1억원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총 공제한도는 1억원이다.

가업승계시 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가업승계 때 세율 10%가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 한도가 종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 매출수입 2천억원 넘어야 정기 세무조사... 국세청, 금액기준 상향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 금액 기준이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 상향은 2019년 1월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이다.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중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 등은 수입이 2천억원에 미달해도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은 순환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성실도 분석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제때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 여부를 분석한 뒤 성실도가 낮은 기업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해도 너무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역시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분류돼 조사받을 수 있다.

### 내년 상반기 차량용 LPG '관세 0%'... 산업부·자동차 업계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열어 원자재, 인건비, 공급망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을 구입하는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 차량용 LPG 관세를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출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 기획재정부, 2023. 12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11.30.(목)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 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정부가 `23.9.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 ❶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

### ❷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 ❸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 범위 현행 유지

\* (현행)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

### ❹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 ❺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 (현행) '24.1.1. → (개정) '26.1.1.

⑥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정부안)  $\text{Max}(\text{일반 공제율}, 1\text{세대 } 1\text{주택 공제율})$

→ (수정) 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

## 법인세법

①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

② 공익법인이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 위반 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부과

\* (현행)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정부안)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수정)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③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 (현행) 5년 → (정부안) 20년 → (수정) 15년

## 조세특례제한법

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 '23.12.31. → (정부안) '28.12.31. → (수정) '26.12.31.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

\*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 120억원

③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출자금 1,000만원 이하 → (개정) 출자금 2,000만원 이하

④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

\* (현행) 월 40만원 → (개정) 월 55만원('2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 적용

**⑥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 (현행)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개정)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한도액 :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 (개정) 연 월세액 1,000만원

**⑦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적용

**⑧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⑨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 (현행) '24.1.1.~'25.12.31. → (개정) '26.1.1.~'27.12.31.

**⑩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유지**

**⑪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

\* (정부안)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 → (수정) 법률로 상향 입법

**⑫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⑬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 공제(한도 100만원)

**⑭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폐지\***

\* 적용기한 : (현행) '25.12.31. → (수정) 폐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❶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 추가 사항

- \* 탁 주 : (현행) 50만원 → (정부안) 100만원 → (수정) 500만원
- \* 기타 발효주류 : (현행) 200만원 → (정부안) 400만원 → (수정) 500만원

### 국세기본법

- ❶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명확화
- ❷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시 신청요건\* 보완
- \* (정부안)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 → (수정)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일정금액 이하

### 국세징수법

- ❶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 시 체납자가 「전자증권법」에 따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의 압류절차 추가
- ❷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 즉시 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
- ❸ 공매재산 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매각을 불허한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도 공매보증 반환

### 관세법

- ❶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 ①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 ②세무사·세무법인, ③세무대리 가능 회계사·변호사,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❷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관세청 고시에 규정) 위임근거 마련
- \*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물품 공급업자 등
- ❸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④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

\* (정부안) 2천만원 이하 → (수정) 5천만원 이하

**⑤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⑥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관련 시정명령 대상 조정\***

\* (정부안)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 (수정)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참고 -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소득세법****① 양식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 분리,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 한도(시행령) 3,000만원</li> </ul> </li> <li>○ 어로어업 소득</li> </ul>	<input type="checkbox"/>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 삭제)</li> <li>○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 한도(시행령 개정) 5,000만원</li> </ul> </li> </ul>

&lt; 개정이유 &gt; 과세형평 제고 및 양식업 지원

&lt; 시행시기 &gt;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소득법 §25)**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li> </ul>	<input type="checkbox"/> 과세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26년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시가 12억원 초과</li> </ul> </li> </ul>

&lt; 개정이유 &gt; 과세형평 제고

&lt; 시행시기 &gt;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③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범위 현행 유지(소득법 §34)

정 부 안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li> <li>○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li> </ul> <p>*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p>	<input type="checkbox"/> 현행 유지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 현행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에 한하여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li> </ul> </div>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④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li> <li>○ 공제세액(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명 : 15만원</li> <li>- 2명 : 30만원</li> <li>-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li> <li>○ 공제세액(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명 : 15만원</li> <li>- 2명 : 35만원</li> <li>-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li> </ul> </li> </ul>

< 개정이유 >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관련

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소득법 §164의3)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li> <li>○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매월</li> <li>○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 매월('24년 시행)</li> <li>○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매월('24년 시행)</li> <li>○ 지연제출 가산세 등</li> </ul>	<input type="checkbox"/>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 매월('26년 시행)</li> <li>○ (좌 동)</li> </ul>

< 개정이유 >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연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②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1개월 내 제출('24년 시행)</li> </ul>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1개월 내 제출('26년 시행)</li> </ul>
<input type="checkbox"/>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24년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유예('26년 시행)
<input type="checkbox"/>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li> <li>- 소규모사업자의 경우</li> <li>'24.1.1.~'24.12.31.에 지급하는 소득</li> </ul>	<input type="checkbox"/> 대상기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1.1.~12.31.에 지급하는 소득</li> <li>- 소규모사업자의 경우</li> <li>'26.1.1.~'27.12.31.에 지급하는 소득</li> </ul>

< 개정이유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⑥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소득법 §95)

정 부 안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용도변경(또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금액 중 큰 금액 [Max(①, ②)]</li> <li>①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li> <li>* 전체 보유기간 : 취득일~양도일</li> <li>② '용도변경일~양도일'에 대해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li> </ul>	<input type="checkbox"/> 계산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① + ②)</li> <li>①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li> <li>* 최대 40% 적용</li> <li>②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li> </ul>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①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  
(법인법 §18의4, §57⑥)

정 부 안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납	<input type="checkbox"/> 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

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 인 하 ○ 지분율 10% 이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2% 이상 ○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좌 동)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5% 이상 ○ (좌 동)
---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①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정 부 안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❶ (증여자) 직계존속 ❷ (공제한도) 1억원 ❸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 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신 설>  <신 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좌 동)</div> <input type="checkbox"/>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 ❶ (증여자) 직계존속 ❷ (공제한도) 1억원 ❸ (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input type="checkbox"/> 통합 공제한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 제 : 1억원

< 수정이유 > 혼인·출산 지원 확대

< 시행시기 >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②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

정 부 안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 합리화 ○ 위반시 제재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제재 수준 변경 ○ 위반시 제재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단, '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가능)

### ③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상증법§71, 조특법 §30의6)

정 부 안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울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li> <li>○ (특례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력 10년 이상 : 300억원</li> <li>- 업력 20년 이상 : 400억원</li> <li>- 업력 30년 이상 : 600억원</li> </ul> </li> <li>○ (기본공제) 10억원</li> <li>○ (세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li> </ul> </li> <li>○ (연부연납 기간) 20년</li> <li>○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li> </ul>	<input type="checkbox"/> 저울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li> <li>○ (연부연납 기간) 15년</li> <li>○ (좌 동)</li> </ul>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저울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 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정 부 안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율) 10년간 50%</li> <li>○ (적용기한) '28.12.31.</li> </ul>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같음)</li> <li>○ '26.12.31.</li> </ul>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②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정 부 안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li> </ul> </li> <li>-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li> <li>-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항구화*</li> <li>*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li> <li>○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li> <li>○ (적용기한) '28.12.31.</li> </ul>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26.12.31.</li> </ul>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③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상증법§71, 조특법 §30의6)

정 부 안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li> <li>○ (특례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력 10년 이상 : 300억원</li> <li>- 업력 20년 이상 : 400억원</li> <li>- 업력 30년 이상 : 600억원</li> </ul> </li> <li>○ (기본공제) 10억원</li> <li>○ (세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li> </ul> </li> <li>○ (연부연납 기간) 20년</li> <li>○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li> </ul>	<input type="checkbox"/>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li> <li>○ (연부연납 기간) 15년</li> <li>○ (좌 동)</li> </ul>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④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특법 §88의5)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div><div><input type="checkbox"/>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div><div><div><input type="radio"/> (대상자) 조합 등*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div><div>*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조특법 시행령)</div><div><input type="radio"/> (대상소득) 예탁금·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div><div><div>- 예탁금 3천만원 한도</div><div>- 출자금 1천만원 한도</div></div><div><input type="radio"/> (세율 및 적용기한)</div></div></div>	<div><div><input type="checkbox"/>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div><div><div><div><div></div><div><div><input type="radio"/> (좌 동)</div></div></div><div><div>- 출자금 2천만원 한도</div><div><input type="radio"/> (좌 동)</div></div></div></div></div>								
<table><tr><td>소득발생 기간</td><td>'25.12.31. 까지</td><td>'26.1.1. ~ '26.12.31.</td><td>'27.1.1. 부터</td></tr><tr><td>감면 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table>	소득발생 기간	'25.12.31. 까지	'26.1.1. ~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소득발생 기간	'25.12.31. 까지	'26.1.1. ~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조특법 §91의19)

정 부 안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요건)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li> <li>○ (적립기간)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최대 24개월)</li> <li>○ (적립한도) 월 40만원</li> <li>○ (적용기한) '26.12.31.까지 가입분</li> </ul>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월 55만원('25.1.1.부터)</li> <li>○ (좌 동)</li> </ul>

< 수정이유 >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5.1.1.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 ⑥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조특법 §91의2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7,500만</li> </ul>	<input type="checkbox"/> 납입한도 완화

<p>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p> <p>*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p> <p>○ (운용가능재산) 예·적금, 회사채, 국내상장주식 등</p> <p>※ 현재는 적금상품만 출시</p> <p>○ (세제지원)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p> <p>○ (납입한도) 연 840만원     &lt;단서 신설&gt;</p> <p>○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p>	<p>○ (좌 등)</p> <p>○ (좌 등)</p> <p>- 다만, 다음요건 충족 시 최초 2년간 1,680만원 이내 범위에서 일시납입 허용</p> <p>▪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 신청</p> <p>▪ 가입후 30일 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60% 이상 납입</p> <p>○ (좌 등)</p>
--	--

< 수정이유 >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형성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⑦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p>□ 월세 세액공제</p> <p>○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p> <p>○ (공제율) 월세액의 15%·17%*</p> <p>*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p> <p>○ (공제한도) 750만원</p>	<p>□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p> <p>○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p> <p>○ (좌 등)</p> <p>○ 1,000만원</p>

< 개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⑧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 ①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99조의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p>□ 일반주택, 농어촌주택을 각 1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p> <p>○ (대상 농어촌주택) ①&amp;②&amp;③</p> <p>①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에</p>	<p>□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확대</p> <p>○ 농어촌주택 소재지 확대</p> <p>① '기회발전특구' 포함</p>



소재 *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등 제외 <b>②</b>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한옥 4억원 이하) <b>③</b> '03.8월~'25.12월간 취득 ○ (요건)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 농어촌 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읍·면·동 소재 여부,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여부와 무관히 허용)  (좌 동)
--	---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②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 121의33)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최저한세) 50% 감면기간만 적용 ○ (적용기한) '26.12.31.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 ③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121의3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요건) <b>① &amp; ② &amp; ③</b> <b>①</b> 3년 이상(중소기업 2년) 사업 영위 <b>②</b>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26.12.31일까지 양도 <b>③</b>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 ①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한 날부터 2년 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하거나 ②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 ○ (과세특례)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35)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요건)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대상 범위 및 의무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li> <li>** 전용계좌를 통해 기회발전특구펀드에 투자</li> </ul> </li> <li>○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0년간 9% 세율로 분리과세</li> <li>○ (적용한도) 투자금액 3억원</li> <li>○ (적용기한) '25.12.31. 까지 가입분</li> </ul>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⑨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99의13)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li> </ul> </li> <li>○ (특례) 손실보상금 익금 불산입</li> </ul>

< 수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⑩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조특법 §104의5)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li> <li>○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li> <li>○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li> <li>○ (적용기간) '24.1.1. ~ '25.12.31.</li> </ul>	<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6.1.1. ~ '27.12.31.</li> </ul>

< 개정이유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⑪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유지  
(조특법 §104의16, 조특령 §104의16)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 과세특례 * 대학, 산업·교육·전문·방통대 등 **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 (특례내용)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 (대체취득 시한) 2년 ○ (대상자산) ※ 시행령 사항 토지, 건축물, 유가증권	<input type="checkbox"/> 현행 유지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현행 제도  ○ (특례내용)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 (대체취득 시한) 1년  ○ (대상자산&lt;시행령&gt;) 토지, 건축물 </div>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⑫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  
(조특법 §104의24, §118의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 ○ (감면내용) - 소득·법인세 감면 ①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 하는 경우 : 7년 100% + 3년 50% ②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 3년 100% + 2년 50% - 관세 감면 ① 완전복귀 : 5년 100% ② 부분복귀 : 5년 50% ※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유지 ○ (업종요건) 대통령령으로 위임	<input type="checkbox"/> 업종요건 상향입법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height: 150px; margin: 10px 0;"></div> ○ (좌 동)  ○ 업종요건을 법률에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㉓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17, §121의19)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내용)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법인세를 감면</li> <li>○ (감면적용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li> <li>○ (감면율) 3년 100% + 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input type="checkbox"/>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margin-left: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경제특구</li> </ul> </li> <li>○ (좌 동)</li> <li>○ (좌 동)</li> </ul> </div>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투자 유인 제고

< 시행시기 > '24.1.1. 이후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㉔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조특법 §126의2)

정 부 안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li> <li>○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td style="text-align: center;">15%</td></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td style="text-align: center;">30%</td></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td><td style="text-align: center;">3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3.4.1.~12.31. 사용분)</td><td style="text-align: center;">(40%)</td></tr> <tr> <td>④ 전통시장</td><td style="text-align: center;">4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3.4.1.~12.31. 사용분)</td><td style="text-align: center;">(50%)</td></tr> <tr> <td>⑤ 대중교통</td><td style="text-align: center;">4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3.1.1.~12.31. 사용분)</td><td style="text-align: center;">(80%)</td></tr> </tbody> </table> <p style="margin-left: 20px;">*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li> </ul>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23.4.1.~12.31. 사용분)	(40%)	④ 전통시장	40%	('23.4.1.~12.31. 사용분)	(50%)	⑤ 대중교통	40%	('23.1.1.~12.31. 사용분)	(80%)	<input type="checkbox"/>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td style="text-align: center;">15%</td></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td style="text-align: center;">30%</td></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td><td style="text-align: center;">3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3.4.1.~12.31. 사용분)</td><td style="text-align: center;">(40%)</td></tr> <tr> <td>④ 전통시장</td><td style="text-align: center;">4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3.4.1.~12.31. 사용분)</td><td style="text-align: center;">(50%)</td></tr> <tr> <td>⑤ 대중교통</td><td style="text-align: center;">4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3.1.1.~12.31. 사용분)</td><td style="text-align: center;">(80%)</td></tr> <tr> <td>⑥ '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td><td style="text-align: center;">10%</td></tr> </tbody> </table> <p style="margin-left: 20px;">** '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li> </ul>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23.4.1.~12.31. 사용분)	(40%)	④ 전통시장	40%	('23.4.1.~12.31. 사용분)	(50%)	⑤ 대중교통	40%	('23.1.1.~12.31. 사용분)	(80%)	⑥ '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	10%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23.4.1.~12.31. 사용분)	(40%)																																						
④ 전통시장	40%																																						
('23.4.1.~12.31. 사용분)	(50%)																																						
⑤ 대중교통	40%																																						
('23.1.1.~12.31. 사용분)	(80%)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23.4.1.~12.31. 사용분)	(40%)																																						
④ 전통시장	40%																																						
('23.4.1.~12.31. 사용분)	(50%)																																						
⑤ 대중교통	40%																																						
('23.1.1.~12.31. 사용분)	(80%)																																						
⑥ '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	1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공제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도서공연등		-
○ (적용기한) '25.12.31.				○ (좌 동)			
						'24년 증가분	
						100만원	

< 개정이유 >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 ㉓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조특법 §126의3)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 (공제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등 ○ (공제금액) 종이발급 : 9.4원, 온라인발급 : 8.4원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폐지  <input type="checkbox"/> ○ (좌 동) ○ (삭제)

< 수정이유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

### ㉓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

정 부 안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합리화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 다만,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봄(1억원 한도 적용) <b>①</b>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b>②</b>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input type="checkbox"/> 감면 종합한도 적용대상 변경  ○ (좌 동)  - 요건 구체화 및 적용기간 축소  <b>①</b> 분필한 토지(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b>②</b>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 내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①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 (주류면허법 §13)

정 부 안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 2배 상향 <input type="radio"/> 아래 금액 이상 주세 포탈 - 탁주 : 100만원 - 기타 발효주류 등 : 400만원 - 증류주, 주정 : 1천만원 - 맥주 : 2천만원	<input type="checkbox"/> 주세포탈 기준금액 추가 상향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checkbox"/> 500만원 - (좌 동)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국세기본법

#### ①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국기법 §28)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소멸시효 중단 사유 <input type="radio"/> 납부고지 <input type="radio"/> 독촉 <input type="radio"/> 교부청구 <input type="radio"/> 압류 <p style="text-align: center;">&lt; 단서 신설 &gt;</p>	<input type="checkbox"/> 소멸시효 중단 제외사유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 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화

#### ②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보완(국기법 §59의2)

정 부 안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확대 <input type="radio"/> 신청인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법인의 신청요건에 자산가액 추가 <input type="radio"/> (좌 동)





○ <신설> 수입금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법인	○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법인
----------------------------------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4.1.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③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국기법 §81의13)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 과세정보 요구는 문서*로 함 *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규정 중	<input type="checkbox"/>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국기법 §85의15)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과세전적부심사 적용 제외사유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하는 경우 < 단서 신설 >	<input type="checkbox"/> 청구요건 완화 ○ (좌 동) -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은 제외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국세징수법

### ①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추가 (국징법 §56의3)

정 부 안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 (압류방법)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자등 :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 계좌관리기관등 :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 < 추 가 >	<input type="checkbox"/>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에 대한 압류규정 추가 ○ (좌 동) - 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류효력)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lt; 추 가 &gt;</li> <li>○ (압류효력 발생시기) 압류통지서가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송달된 때     &lt; 추 가 &gt;</li> <li>○ (압류 통지)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li> </ul> </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류통지서가 명의개서대행 회사등에 송달된 때</li> </ul> </li> <li>○ (좌 동)</li> </ul>
--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②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  
(국징법 §57)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압류 즉시해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li> <li>○ 국세 부과와 전부를 취소한 경우</li> <li>○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li> <li>○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은 여지가 없어 강제 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lt; 신 설 &gt;</li> <li>○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li> </ul>	<input type="checkbox"/> 압류 즉시해제 사유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margin-left: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 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li> <li>○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li> <li>○ (좌 동)</li> </ul> </div>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즉시 해제 사유 명확화

③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차순위 매수신청인 추가(국징법 §71)

정 부 안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매보증 반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찰 후 :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매수신청인</li> <li>○ 체납액 완납으로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li> </ul>	<input type="checkbox"/> 대상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margin-left: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된 경우 : 매수인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 차순위 매수신청인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 최고가 매수신청인	○ (좌 동) ○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 매수신청인
--	--

< 수정이유 > 차순위 매수신청인도 매각불허 결정시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추가

## 관세법

### 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관세법 §116의6)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구주체) 과세정보 당사자</li> <li>○ (제공주체) 관세청</li> <li>○ (제공정보) 「관세법」, 「FTA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 「관세법 시행령」 별표2의2에서 열거</li> <li>○ (제공대상) 본인 또는 제3자* * ①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② 세무사, 세무법인 ③ 세무대리 가능 회계사·변호사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li> <li>○ (제공대행)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대행기관에서 대행 가능</li> <li>○ (의무사항) 과세정보 유출 방지, 비밀유지,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li> <li>○ (제재수단)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li> </ul>

< 수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

< 시행시기 > '24.7.1. 이후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 ②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관세법 §22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부정으로 등록한 경우</li> <li>- 운영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li> </ul> </li> <li>○ (제재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취소,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 제재 위임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취소,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li> </ul>

< 수정이유 > 관세청 고시로 규정된 행정제재의 법적 위임근거 필요  
< 시행시기 > '24.1.1.부터 시행

③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  
(관세법 §264의11 및 관세법 §26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구주체) 관세청</li> <li>○ (요구 받는 대상)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li> <li>○ (요구정보) 마약류의 반입·반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li> <li>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li> <li>③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정보) 수입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반입 및 유통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의 위치정보</li> <li>○ (의무사항)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의 저장·보호·이용 및 파기 등을 준수</li> <li>○ (세부사항) 구체적인 수집 범위·방법·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li> </ul>

< 수정이유 > 마약밀수 단속 강화  
< 시행시기 > '24.1.1. 이후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

④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제재 강화(관세법 §276)

정 부 안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거부·기피한 자</li> <li>- 종합보세구역 내 행위에 대한 관세청장·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li> <li>- 서류 제출·보고 또는 필요 사항에 대한</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li> </ul>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margin-left: 20px;"> - (좌 동) </div>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거짓 보고한 자 -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시·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	- (좌 동)
---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⑤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  
(관세법 §327·§327의2 등)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출연의 법적 근거 마련 <input type="checkbox"/> (목적) 관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input type="checkbox"/> (사업) -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획·조사·컨설팅·연구·교육·홍보 -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input type="checkbox"/> (원장) 한국관세정보원의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 <input type="checkbox"/> (출연·보조)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 <input type="checkbox"/> (지도·감독) 관세청장은 한국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 가능 <input type="checkbox"/> (적용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

< 수정이유 > 관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 시행시기 > '24.7.1.부터 시행

⑥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관련 시정명령 대상 조정(관세법 §327의3)

정 부 안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신설 및 처분 대상에 시정명령 추가 <input type="checkbox"/> (시정명령 근거) 관세정보 시스템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가능 <input type="checkbox"/> (처분 대상) - 사업자의 자격미달 (예: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등) - 거짓 또는 부정한 지정	<input type="checkbox"/> 관세청에 의한 제재 대상에서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제외 <input type="checkbox"/>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 저해 우려 →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 저해 우려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유지의무 위반</li> <li>- 설비·인력 등 지정기준 미달</li> <li>- 관세청장의 지도·감독 위반</li> <li>- 시정명령* 위반</li> </ul> <p>* 관세정보시스템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좌 동)</p> <p>* 관세정보시스템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자문서중계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p>
--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www.eAnSe.com**



세련된 디자인, 알기쉬운 메뉴 체계, 모바일 버전 제공



600여개의 각종 회계·세무·재무 동영상 강의



회계·세무 전문가의 빠르고 정확한 30분 내 Q&A



안세재경저널·세계재경저널 모든 내용 수록

**모든 회원은 eAnSe.com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2023. 11

- (추진배경) 지난 11. 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신속대응)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 13.)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세무조사 (10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 등 총 108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11. 30.)</li> <li>- ❶ 사채업자 89명 ❷ 중개업자 11명 ❸ 추심업자 8명</li> </ul>
자금출처조사 (3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대부이익을 일가족의 재산취득·사치생활에 유용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총 31명 전국 동시 자금출처조사 착수 (11. 30.)</li> </ul>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탈세가 확인되어 세금을 추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하며 고액 체납한 총 24명 즉각 재산추적조사 착수</li> </ul>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으로 최종 이익을 누리는 전주(錢主)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탈세제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 ▶ 국세청 홈페이지, 전화 126, 세무서 우편접수·FAX로 탈세제보
- ▶ 탈세제보로 추정된 세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최대 40억 원 지급

## 1 추진배경

□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전체 대출규모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이용자 수 감소, 1인당 대출액 증가, 연체율 상승 추세로 불법사금융 규모 확대 우려 (금감원 보도자료)

-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수 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사례도 빈번하며, 심지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해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 이자 4,000%, 연체하면 합성 나체사진 협박...10대까지 노려 ('23. 9. 12. 언론보도) -
· 인터넷 비대면으로 10만~50만 원 소액 대출해준 뒤, 연체 시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사회초년생이고, 10대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파악
- 20만 원 빌렸는데 6억 9천만 원 갚아라... 신생아 사진까지 보내 협박 ('23. 6. 13. 언론보도) -
· 생활비로 쓰기 위해 다음주까지 35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빌렸으나, 연체되자 돌려막기 상환을 시켰고, 1년 뒤 갚아야할 돈은 무려 6억 9천만 원으로...
· 5,000% 이자에 살해 위협까지...돈 갚으라는 협박전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와

□ 지난 11월 9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국세청과 여러 정부부처·기관이 모여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실제 사례를 청취하며 불법사금융 문제의 중대함과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 곧 이은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11. 14. 국무조정실)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관계부처·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11. 14. 범정부 TF 회의에서 참여기관을 국세청·대검찰청까지 확대하기로 합의

□ 이에,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앞장서면서,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2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국세청의 신속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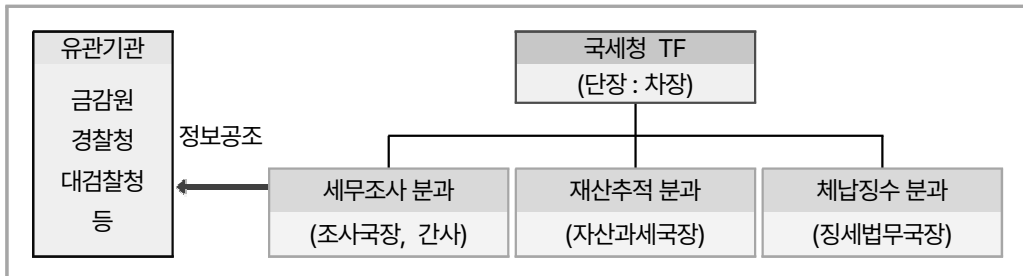
### ①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설치

□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 9.) 직후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신속히 설치(11. 13.)하였습니다.





- TF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하여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및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까지 불법사금융 쏠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와 관련인에 대한 자산변동·소비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재산은닉 혐의 포착 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 체납징수 분과에서는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당기관이 보유한 수사·조사·단속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기로 하는 등 신속한 정보공조도 추진하였습니다.
- 이처럼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자 하는 정부기조에 발 맞추어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동안 국세청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② 불법사금융업자 108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먼저, 국세청은 11.30.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제보, 자체수집 현장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하였으며,
  - 유형별로는 ❶ 사채업자 89명, ❷ 중개업자 11명, ❸ 추심업자 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되었습니다.
  - 이번 세무조사는 범정부 TF 참여기관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고, 특히 조사요원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는 조직적 불법사채업자와 관련해서는 경찰관 동행 등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탈루유형 /

사채업자 (8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준생, 주부 등을 상대로 연 수 천%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주고, 신상공개·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 불법추심한 사채업자</li> <li>· 노숙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에게 카드깡 대출해준 뒤, 카드매출채권 담보로 금융기관과 신탁 체결하여 대부수입 자금세탁·회수하는 사채업자</li> <li>· 폰지사기꾼에게 폰지사기 운영자금을 여러 차례 대여해주고 고율의 이자수입을 챙기면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축소한 사채업자</li> </ul>
중개업자 (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신용층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대부업체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대부업체 배너광고 대가로 얻은 수입도 신고누락한 대출중개 플랫폼 운영업자</li> <li>· 저축은행을 사칭하여 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을 중개하여 얻은 불법수수료 수입과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한 불법 중개업자</li> </ul>
추심업자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변위협 등 불법추심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부당 손금산입하고, 법으로 금지된 부실채권 매입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관련 수익 신고누락한 채권추심 대행업체</li> <li>·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거래처를 끼워넣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수입을 국외로 이전한 대부·추심업자</li> </ul>

- 이번 불법사금융업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서는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강력히 조사하는 것 외에도
- 필요 시 검찰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확정전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또한, 조사대상 관련인을 폭넓게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대한 확대(최대 10년)하여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습니다.
  - 특히, 차명계좌·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놓치지 않고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③ 불법사채소득으로 재산취득·사치생활한 31명 자금출처조사 착수

- 그리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부업을 미등록하고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총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 사금융업자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신고누락하여 직원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취득 및 호화사치 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혐의자 31명을 포착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급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명품쇼핑, 해외여행 등의 사치성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등 불법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금전 대부 시점부터 자녀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이후 이자와 원금을 모두 자녀가 수취하거나,
  -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경매 개시하여 자녀명의로 낙찰 받는 등 단순한 증여 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러한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 금융추적 과정에서 불법수익이 제3자와 연관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실명전환 여부를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 4 불법대부업 체납자 24명 은닉재산 추적조사 진행 중

- 마지막으로,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하여 재산추적조사를 즉각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 이들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하며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해가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입니다.
- 이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관련 자료 검토, 재산·소득 변동상황 분석, 소비지출 내역 분석, 체납자·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실시하고,
  -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한 재산소득의 이전·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실시하여 불법대부업자가 체납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겠습니다.

### 3

####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추징하겠습니다.
- 또한,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

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탈세제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 무능력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명의를 위장하거나,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숨어있는 전주(錢主)를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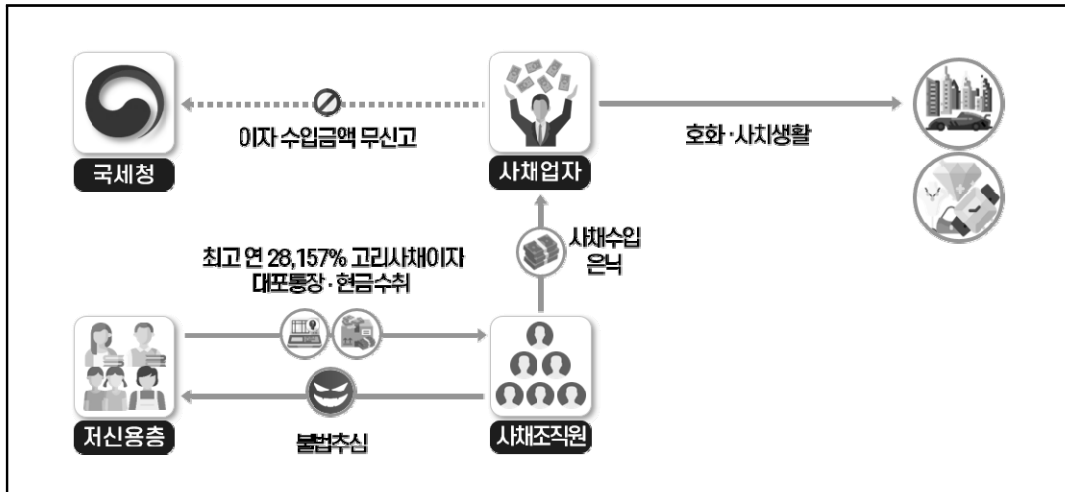
- ▶ (탈세제보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화 126, 세무서 우편접수 또는 FAX
- ▶ (탈세제보 포상금) 탈세제보를 직접근거로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5~20%)을 적용하여 제보자에게 제보 건당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5천만 원 이상 추징 시)
- ▶ (포상금 지급사례) 사업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여 약 32억 원의 이자를 수취하고도 신고누락한 대부업자에게 약 13억 원이 추징되었으며, 제보자\*에게 약 2.2억 원의 포상금 지급
- \* 대부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 첨부

- 앞으로도 국세청은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조를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붙임 1 -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 착수사례

<b>착수사례 1</b> <b>[사채업자]</b>	<b>불법사채조직 운영하며, 저신용층에게 단기·소액대출 후 수 만%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추심 등으로 불법추심한 사채업자</b>
--------------------------------	---



###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 ▶ □□□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 간 가명,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 차량을 사용하며,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해 철저하게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
- ▶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하여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하면서 채무자를 모집하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2,000~2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
  - \* (예시) 20만 원 빌려주고 7일 후 128만 원 상환, 약 15만 원 빌려주고 12일 후 61만 원 상환
- ▶ 변제기일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특히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 등을 가족,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유교하는 '나체추심' 등의 방법으로 불법추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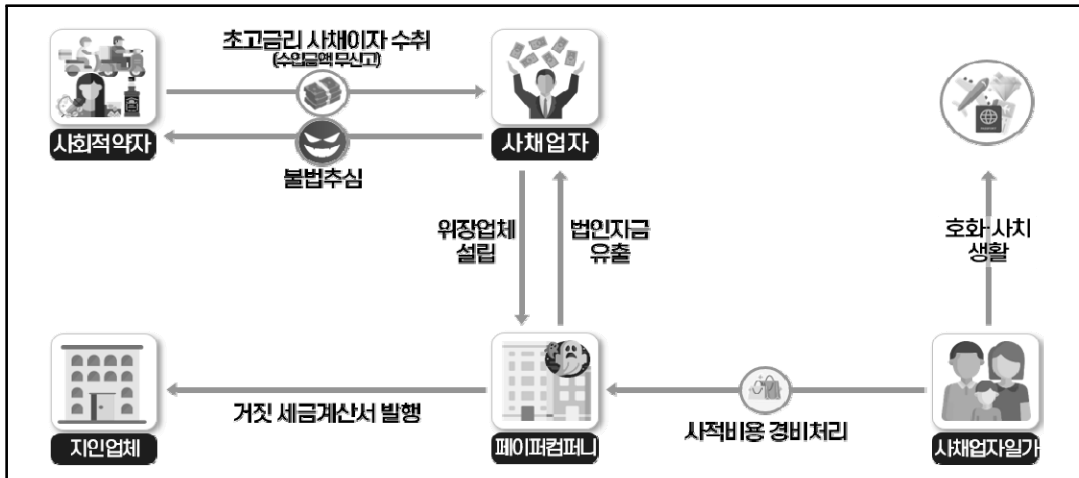
### □ 주요 탈루혐의

- □□□는 불법사채 이자를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하며 이자수입을 전액 신고누락
  - \* 특정 장소에 현금박스를 놓아두고, 중간책이 수거해가는 비대면 방식
- 불법 대부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고급아파트 거주, 명품 시계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

### □ 조사방향

⇒ 불법사채 이자수익 무신고 엄정 조사

**착수사례 2** 유형업 종사자 등에게 대출 후 고금리를 수취하고, 폭력·협박으로 불법추심하  
[사채업자] 며,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대부수익 자금세탁한 사채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 ▶ □□□는 ◇◇지역 일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연합회' 前회장을 지내는 등 지역유지로 활동하는 자로
- ▶ 대부업 미등록하였으며, 주로 유형업소 종사자, 택배달 기사,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액·단기대출 해주고, 52~1,300% 등 초고금리 불법이자를 수취
  - \* (예시) 400만 원 빌려주고 12일 후 580만 원 상환, 500만 원 빌려주고 103일 뒤 739만 원 상환
- ▶ 변제기일이 지나면 폭력과 협박을 동원하여 불법추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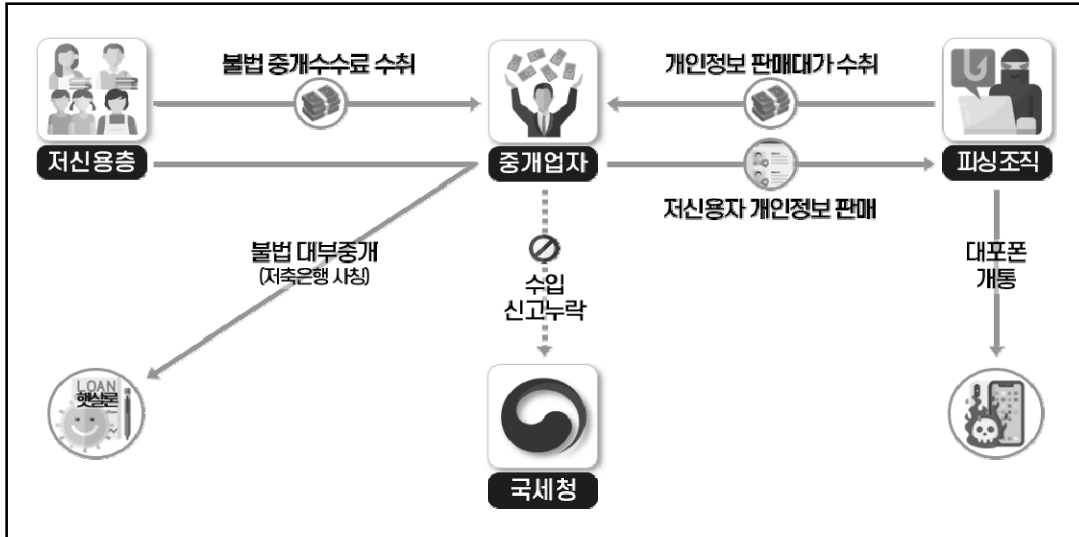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는 불법사채업을 영위하며, 관련 이자수입을 전액 신고누락
- 사업실체가 없는 운수업 법인 (주)△△△을 설립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계상하고, 거짓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불법사채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자금세탁하여 은폐
  - □□□과 배우자는 (주)△△△의 법인 신용카드를 병원, 미용실, 마트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계좌에 법인자금을 이체하는 등 법인자금 유출
- □□□의 가족 2명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00억 원에 달하며, 수시로 해외출국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 조사방향

⇒ 불법사채 이자수익 무신고, 법인자금 유출 엄정 조사

**착수사례 4**    불법으로 ‘햇살론’ 대출상품 중개한 후 고액의 중개수수료 편취하고, 저신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중개업자  
**[중개업자]**    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중개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 ▶ ○○○는 저축은행 등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햇살론’ 대출상품을 중개하고 대부금액의 10 ~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하였으며, 차명계좌 및 대포폰 이용하여 수익 은닉
- ▶ 중개과정에서 입수한 저신용자 명단 및 개인정보를 광고성 스팸 문자 발송에 사용될 대포폰 개통에 활용하도록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

□ 주요 탈루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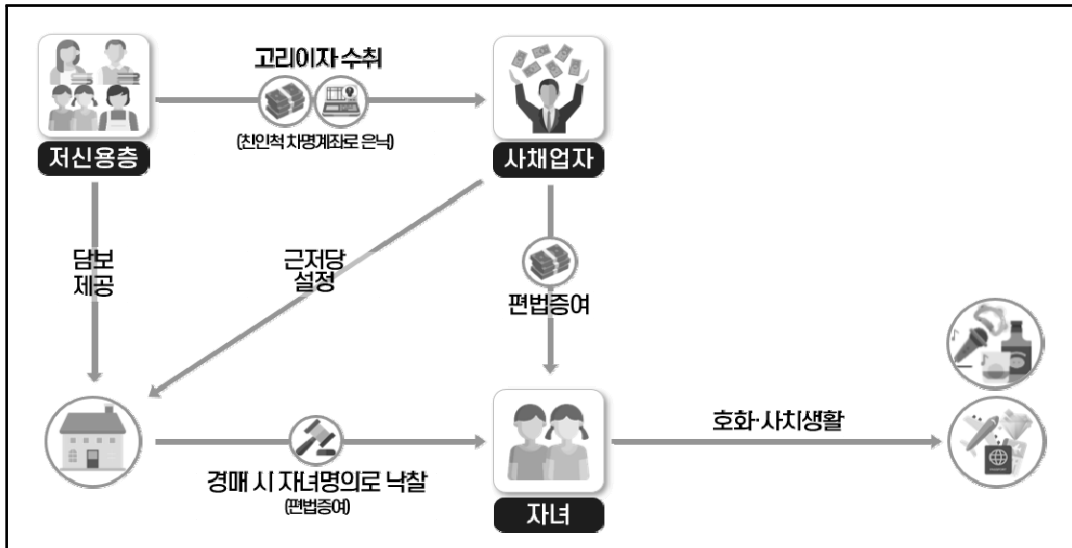
- ○○○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여 따로 대출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 대출 상품을 저축은행이라고 사칭하여 불법 대부중개하고 00억 원의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후 수입금액 신고누락
- \*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 불법 대부중개 과정에서 파악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여 받은 대가 0억 원도 신고누락

□ 조사방향

⇨ 대부중개 수수료 및 개인정보 판매 수입금액 누락 혐의 등 업정 조사

## 붙임 2 - 불법사금융업자 등 자금출처조사 착수 사례

착수사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이자수익을 은닉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담보물건을
[자금출처]	자녀명의로 낙찰받는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편법증여



### □ 주요 탈루혐의

- □□□은 ○○지역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건설 일용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 법정 최고이자율(연20%)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수익을 은닉함
- 은닉한 자금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 ◇◇◇의 해외여행비용(총 33회) 및 신용카드 대금(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 특히, 채무자가 원금상환을 못하는 경우 담보 물건을 경매처분하면서, 이를 자녀 명의로 낙찰 받는 방법으로 부동산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

### □ 조사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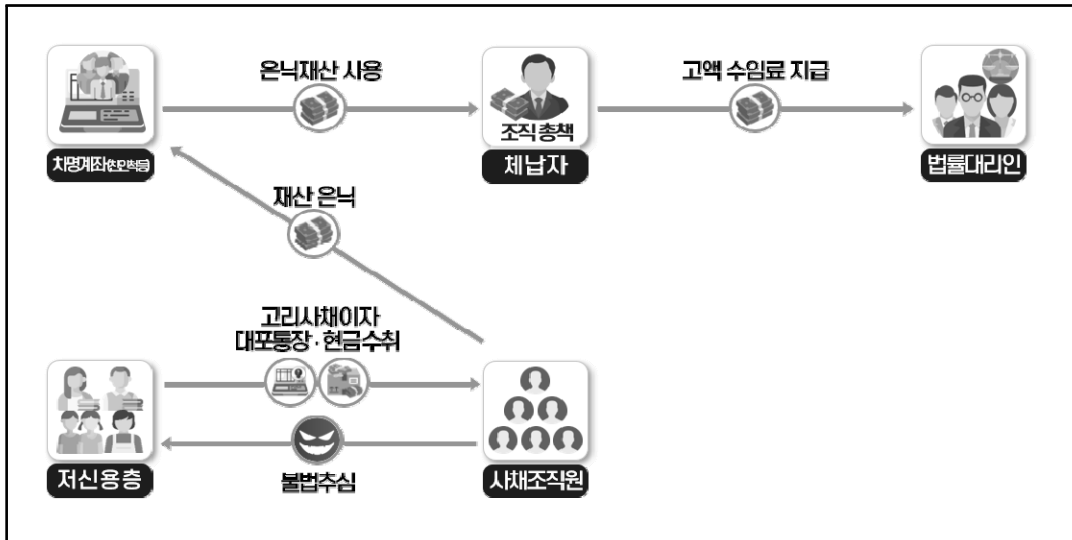
⇒ 금융추적을 통한 편법·우회 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





### 붙임 3 - 불법사금융업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착수사례

<b>착수사례</b>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 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수입은
<b>[ 체납추적 ]</b>	차명으로 관리하며 고액 법률비용 지급한 재산은닉 체납자



####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미등록 대부업자 □□□는 ' 19.12월부터 ' 21.5월까지 전국에 8개 팀, 46명의 조직원을 동원하여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천%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을 영위
  -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00억 원 부과 후 전액 무납부 체납
- 체납자가 수익금 00억 원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하여 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

#### □ 재산추적조사 방향

- ⇒ 계좌명의를 대여한 친인척, 지인에 대해 재산변동 현황을 분석하고,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고액의 수입료에 대해 자금출처를 확인,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시